



기획재정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17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11. 17.(목) 10:00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 최진규 (044-215-8570)
		담당자	사무관 김주민 (rlawals1@korea.kr)

'22.3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

- '22.3/4분기 가계소득은 근로·사업소득이 증가하며 총소득이 +3.0% 증가,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△2.8% 감소
 - 상용직, 자영업자 수 증가 등 양호한 고용시장, 대면활동 정상화에 따른 서비스업(숙박음식·여가 등) 개선 등으로 근로·사업소득 증가
 - 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11.4<+5.4%> (사업)99.1<+12.0%> (이전)65.2<△18.8%>
 - 총소득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증가
 - * 분위별 소득 증감율(%): (전체)+3.0 (1분위)△1.0 (2)+2.7 (3)+2.6 (4)+2.8 (5)+3.7
 -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저소득계층(1·2분위)의 근로·사업소득 상승율이 고소득계층인 5분위를 크게 상회
 - *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(전년비, %): **(1분위)+21.1** (2)+11.3 (3)+13.8 (4)+3.9 (5)+1.8
 - 분위별 사업소득 증감률(전년비, %): **(1분위)+22.5** (2)+13.5 (3)△4.4 (4)+15.9 (5)+16.1
 - 다만, 1분위의 경우 '21.3분기에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(하위 88%, 1인 25만원) 효과 소멸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감소(△15.3%)하며 총소득 감소*
 - * 모든 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 감소하였으나,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1분위에 큰 영향
 -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율(%): (1분위)△15.3 (2)△26.0 (3)△25.1 (4)△36.0 (5)△26.9
- 소비지출은 물가상승·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증가(+6.2%)하였으나, 처분가능소득(+2.0%)이 소폭 증가하며 흑자액은 감소(△6.6%)
- 소득 5분위배율은 5.75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(+0.41배p)
 - ※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'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
 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0.3/4)5.92 ('21.3/4)5.34 **('22.3/4)5.75**

◇ 정부는 現 소득·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
→ 경기·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소득·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①취약계층을 위한 고용·사회안전망 강화 ②물가안정 등을 통한 저소득층 가구부담 완화, ③경제활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

전체 가구소득

□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6.9만원, 전년동기대비 +3.0% 증가

○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△2.8% 감소

□ (소득항목별) 근로·사업소득은 증가, 이전소득 감소

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11.4<+5.4%> (사업)99.1<+12.0%> (이전)65.2<△18.8%>

○ (근로소득) 고용 증가¹ 및 임금 상승² 등 영향으로 증가

1」 취업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1.3/4)57.7 (4/4)66.0 ('22.1/4)100.1 (2/4)88.0 **(3/4)78.0**

2」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1.3/4)5.0 (4/4)5.2 ('22.1/4)7.2 (2/4)4.2 (7~8월)4.6

○ (사업소득) 자영업자 수 증가¹, 서비스 업황 개선² 등 영향으로 증가

1」 자영업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1.3/4)△0.5 (4/4)4.8 ('22.1/4)10.3 (2/4)9.8 **(3/4)15.0**

2」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율(전년비, 불변지수, %): ('22.1/4)4.1 (2/4)5.5 **(3/4)5.9**

○ (이전소득) 사회안전망 강화¹, 2차 추경 지속집행² 등에도 불구하고, 작년 3분기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책지원³의 (-)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감소

1」 기초연금 대상 확대금액 인상,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인상,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생계) 등(1월~)

2」 '22.2분기 84.4% 집행, '22.3분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속 지원

3」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(8.6조원),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(4.2조원) 등

분위별 소득

□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

* 분위별 소득 증감율(%): (전체)+3.0 (1분위)△1.0 (2)+2.7 (3)+2.6 (4)+2.8 (5)+3.7

○ (1분위) 근로(+21.0%)·사업(+22.5%)소득은 증가하였으나, 이전(△11.7%) 소득이 감소하며 총소득 감소(△1.0%)

■ 임시·일용직 취업자 감소*에도, 임금상승 및 전체 취업자수 증가로 근로 소득이 증가하고, 대면서비스업(숙박음식업)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도 증가

* 임시직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1.2/4)34.9 (3/4)33.5 (4/4)14.8 ('22.1/4)29.5 (2/4)2.5 **(3/4)△8.3**

■ '22년 본예산, 2차 추경 등의 공적이전소득 증가 효과가 상생 국민지원금* 등 작년 3분기 (-) 기저효과로 상쇄되며 공적이전소득 감소(△15.3%)

* 하위 88%에 1인당 25만원 지급(4인가구 100만원, 8.6조원)

○ (5분위) 이전소득은 감소($\Delta 16.3\%$)하였으나, 근로(+1.8%)소득과 사업(+16.1%)소득 증가로 총소득 개선(+3.7%)

- 사업체 임금상승¹⁾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으며, 고용원 有·無 자영업자 증가²⁾, 서비스업황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도 증가

1) 상용직 임금상승률(전년비, %): ('22.1)22.8 (2) $\Delta 6.5$ (3)6.7 (4)2.9 (5)5.3 (6)5.0 **(7)4.3 (8)5.5**

2) '22.3분기 자영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고용원有) 7.5, (고용원無) 7.5

지출 · 가계수지

□ (처분가능소득) 비소비지출 증가(+6.6%)에도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증가(+2.0%)

※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(조세, 연금지출, 사회보험료 등)

*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감율(%): (1분위) $\Delta 0.9$ (2)+2.5 (3) $\Delta 0.3$ (4)+0.6 (5)+4.2

□ (소비지출)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70.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+6.2% 증가(실질 +0.3%)

-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대면활동 관련 지출은 증가¹⁾ 하였으나, 고물가로 인해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, 식료품, 주류 등 지출은 감소²⁾

* 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, 명목/실질): (오락·문화)+27.9/+23.8 (음식·숙박)+22.9/+13.1 (가사) $\Delta 9.1/\Delta 13.5$ (식료품) $\Delta 5.4/\Delta 12.4$ (주류) $\Delta 0.8/\Delta 3.1$

□ (가계수지) 흑자액은 114.8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$\Delta 6.6\%$ 감소하였고, 평균소비성향은 70.2%로 전년동기대비 2.8%p 증가

※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, 평균소비성향 = (소비지출 / 처분가능소득)×100

- 적자가구 비율은 25.3%로 전년동기대비 3.7%p 증가

※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함(처분가능소득-소비지출<0)

*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(%): (1분위)57.7 (2)25.4 (3)18.5 (4)14.9 (5)10.0

소득분배

□ (5분위배율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.75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(+0.41배p)

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: ('20.3/4)5.92 ('21.3/4)5.34 **(22.3/4)5.75**

- ① '22.3/4분기 가계소득은 근로·사업소득이 증가하며 총소득이 +3.0% 증가,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△2.8% 감소
-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 증가
 - * 분위별 소득 증감율(%): (전체)+3.0 (1분위)△1.0 (2)+2.7 (3)+2.6 (4)+2.8 (5)+3.7
 - 물가 상승세 지속*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△2.8% 감소
 - *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1월)3.6 (2)3.7 (3)4.1 (4)4.8 (5)5.4 (6)6.0 (7)6.3 (8)5.7 (9)5.6
- ② 양호한 고용시장, 자영업자수 증가 등으로 모든 분위에서 주요 시장소득은 증가*한 반면, 상생 국민지원금 등 '21.3분기 정책지원효과** 소멸로 이전소득 감소
- 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11.4<+5.4%> (사업)99.1<+12.0%> (이전)65.2<△18.8%>
 - **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(8.6조원),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(4.2조원) 등
 - 취업자 증가(+78.0만명) 등으로 근로소득이 +5.4% 상승, 자영업자 증가(+15.0만명), 서비스업(숙박음식업 등)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도 +12.0% 상승
 -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저소득계층(1·2분위)의 근로·사업소득 상승율이 고소득계층인 5분위를 크게 상회
 - *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(전년비, %): (1분위)+21.1 (2)+11.3 (3)+13.8 (4)+3.9 (5)+1.8
 - 분위별 사업소득 증감률(전년비, %): (1분위)+22.5 (2)+13.5 (3)△4.4 (4)+15.9 (5)+16.1
 -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¹⁾, 2차 추경 지속 집행²⁾ 등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(8.6조원) 등 '21년 3분기 정책지원효과가 소멸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감소(△26.1%)
 - 1) 기초연금 대상 확대·금액 인상,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인상,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생계) 등
 - 2) '22.2분기 84.4% 집행, '22.3분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속 지원
 - 1분위 공적이전소득 감소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, 총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 구성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
 - *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율(%): (1분위)△15.3 (2)△26.0 (3)△25.1 (4)△36.0 (5)△26.9
- ③ 소비지출이 물가상승·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증가(+6.2%)하였으나, 처분가능소득(+2.0%)이 소폭 증가하며 흑자액은 감소(△6.6%)
- ④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.75배로 상승(+0.41배p)
- ※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'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
 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0.3/4)5.92 ('21.3/4)5.34 (**'22.3/4)5.75**)

□ 정부는 現 소득·분배상황을 비롯한 現제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

⇒ 경기·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소득·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

①취약계층을 위한 고용·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②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며, ③경제활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

❶ 복합적 경제위기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·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노력

▪ '23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(+5.47%), 보장성 강화 등 두터운 소득안전망 구축(사회복지지출 '22년 184.9 → '23년 205.8조원 +10.9조원)

▪ 노인·장애인·취약청년 등 취약계층의 소득·일자리·돌봄지원 강화 등 사회적약자 삶의 전 영역을 더 두텁고, 더 촘촘하게 지원

* 기초연금 인상(月 30.8 → 32.2만원),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제공, 장애수당 50% 인상 등

▪ 아울러,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

❷ 물가·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하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담도 완화

* (농축수산물) 「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」 既마련, 배추·무 등 채소류 집중 수급관리, 가격불안품목(명태·고등어, 바나나·망고·파인애플) 관세인하 등

(가공식품) 농식품부 중심 모니터링 강화 및 업계 협의 → 연쇄인상 없도록 적극 대응

(에너지) 향후 수급·가격 불확실성 상존 →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적극 시행

❸ 아울러, 민간을 중심으로 시장소득·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·투자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* 추진

*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강화 대책 순차 마련,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 가동 등